

주요 내용

■ 아시아 각국의 Y2K 대응과 그 함의 ■

국가별 준비 상황

- (국가간 다양한 수준) 싱가포르와 홍콩은 거의 모든 평가기준 면에서 안정적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등은 부문간 준비상황에 차이가 있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국은 Y2K에 대한 대응이 가장 미진한 편임. 특히 기간시설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의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부문별 준비 상황

- (금융 부문) 은행이나 증권시장은 Y2K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임
- (전력 및 항공산업 부문) 전력공급 관련 각 부문에서 완벽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전력 부문이나,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Y2K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가 어려운 항공산업 분야는 그 준비가 불투명함

함의

- (자금의 이동) 상대적으로 Y2K 대응이 잘 된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2000년이 다가올수록 선진국 투자자문사들은 기본적으로 Y2K에 대한 대응 속도가 낮은 국가들의 자산에 대해 기피 양상을 보일 것임
- (경쟁 우위 확보 기회) Y2K로 인한 혼란은 선진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우량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즉 Y2K 문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 아시아 우량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으며 자사와 관련사들의 주가도 부양할 수 있을 것임

아시아 각국의 Y2K 대응과 그 함의

양 성 수

개관

- (자금의 이동) 2000년이 다가올수록 Y2K에 많이 노출된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국가로 투자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홍콩과 싱가포르의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인도 등의 경우 공공 시설물, 특히 전력이나 원자력 등 기간시설 부문에서 준비가 미흡함
- (Y2K에 대한 대응의 차이) 특히 중국 등의 몇몇 국영 기업들은 과다한 부채로 인해 Y2K 문제를 처리할 만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함
 - 주요 기간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 기업의 Y2K에 대한 무방비는 향후 해당국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아시아 정부들의 대응)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Y2K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과 규제 장치를 정비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능 오작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Y2K 준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싱가포르 금융감독기구는 각 금융기관 별로 Y2K 문제로 인해 기능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당해 기관의 CEO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음

부문별 · 국가별 준비 상황

- (금융 부문) 은행들은 비교적 Y2K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상당수 증시들은 Y2K 시험을 마쳤거나 운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은행간 수준에서의 시스템 통합 문제, 고객들의 협조, 예금자의 신뢰도 등의 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음
 - 주식 시장의 경우, 증시 시스템 내부보다도 전력이나 통신, 주식 중개 회사의 시

-
- 스템 해결 여부가 오히려 더 큰 문제임
 - 특히 Y2K 문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증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전력 부문) 준비 상황 혹은 진척도를 체크하기 어려움
- 상장된 개별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상호 연계된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는 어려움
 - 전력 부문은 그 특성상 발전, 전송, 배분, 고객 등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 모든 부문에서 완벽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전력 공급의 핵심부문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네 가지 연결고리 중 어느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음
 - 따라서 HKE(홍콩전기), Kepco(한전)와 같이 네 가지 부문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전력사들이 문제 해결에 보다 높은 신뢰도를 주고 있음
- (항공 부문)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볼 때 Y2K 문제를 100%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문임
- 케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콰타스(Quantas), 싱가포르 에어(Singapore Air) 등 선진 항공사들은 100% 해결을 자신하고 있고, 대한항공, 중국항공 등도 조만간 해결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 비용과 위기시 대응을 위한 제2 플랜이 전무하여 준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결국 시간이 갈수록 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영업 중단을 결정할 항공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통신 부문) 통신망 그 자체보다 통신 요금 수납에 따른 손실이 우려됨
- 이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문제보다 요금 수입에 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
 - 대규모 통신 사업자들은 Y2K 문제로 네트워크 자체의 운행이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라 장담함. 하지만 통신료 수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존의 고객 사용 내역을 대조하여 체크할 다른 방법이 없어 상당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음

- (국가별 준비도) 아래 표는 국가별 준비 진척도를 나타낸 것임
-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여전히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함의

- (투자 패턴의 변화) 연말이 다가올수록 선진국 투자자문사들은 Y2K에 대한 대응 속도가 낮은 국가들의 자산에 대해 기피 양상을 보일 것임
- Y2K 안전 지역으로 유동성이 집중될 것이며, 또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 주식으로 투자가 유도될 것임
- 선별 기준은 경영진의 Y2K에 대한 의식과 대응 자세, Y2K 대응책 시행 과정, 내부 및 외부적 점검, 비상시 대응책의 준비도 등임.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정부의 Y2K 해결 의지와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국가별 Y2K에 대한 위험 노출 정도>

위험 수준	국 가 및 내 용
전반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싱가포르) 안정적 수준 확보 · 금융부문, 자금 결제부문, 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제공자, 전력, 에너지 등 국가간시설, 정부 등 여섯 가지 평가기준 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함 · Y2K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모임인 Global 2000 Coordinating Group은 여섯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나라에 소위 "Green rating"을 부여함 · 엄격한 테스트에다 비상시 계획까지 점검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응률도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부분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은행, 통신, 전력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은 준비가 진척 · 정부는 2억 2,500만 달러를 Y2K 해결에 투자했으나,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진하고 비상시의 대응계획이 불충분함. 증시의 준비상황은 안정적인 편임 - (필리핀) 기업과 정부기관들에 Y2K 준비상황을 공개토록 하는 법률 제정 ·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법적 제재를 받게 됨. 다만 국가전력공사는 Y2K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편임 -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의 대응도 적절한 편 ·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인식은 확실한 편이나 그 대응속도가 늦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태국) 민간부문의 대응이 신속하나 국영 기업들의 처리 상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음 · 태국 기업들은 4/4분기 이전 대부분 Y2K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마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으나 기간 국영기업인 전기공사는 자금난으로 인해 Y2K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위험 수준	국 가 및 내 용
전반적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아직까지 몇몇 대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준비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이 상대적으로 전산화된 비중이 낮아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적은 편임 · 99년 6월말이 몇몇 부문의 Y2K 문제를 점검하는 데드라인이었고 중국정부는 8월 말에도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뢰도가 낮음 - (인도) 인도의 Y2K 해결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는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들만이 그 준비에 열심일 뿐, 정부부문이나 중소기업들, 기타 기간사업자들은 거의 준비가 없으며 인력도 부족함 · 통신망은 정상 가동될 지 모르나 자금결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주식시장도 99년 9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양한 테스트 계획은 아직까지 없음 -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Y2K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과 국영기업의 대응이 크게 미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국영기업인 PLN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Y2K 해결에 자금을 투입할 엄두도 못내는 실정임. 통신분야도 Y2K 프로젝트의 잠정적 연기를 선언했음

- (경쟁 우위 확보 기회) Y2K로 인한 혼란은 선진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우량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Y2K 문제에 대비가 된 아시아 우량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시장에서 이 기업들과 관련한 주가가 상승하여 비교적 장기 보유 전략을 택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음
 - 특히 기간구조를 운영하는 국영기업들이 Y2K에 대한 준비 미흡으로 큰 혼란을 겪을 때에 이를 대체할 민간 상장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자산에 대한 매수 전략은 큰 이익을 가져다주게 됨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Y2K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사용한 자금 내역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면서 연말 주가 상승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받을 것임

(yangs@hri.co.kr ☎ 724-4017)